

#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공감대 형성... 낙농제 개편 급물살

차관 주재 낙농제도 개편 간담회 원유 중 5% 이내 가공유가격 적용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도 개편 세부 실행방안 마련 후 내년 시행

정부의 원유가격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대해 낙농가 일부가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어 국산 원유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낙농제도 개편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김인중 차관 주재로 생산자와 수요자,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안에 대해 큰 틀에서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작년 12월 국산 낙농산업 침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마시는 우유(음용유)와 가공유의 용도별 가격을 차등화해 결정하고, 우윳값을 정하는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을 예고했다. 이에 낙농가는 수입감소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제도 개편을 위해 필요한 낙농진흥회 개최조차 무산되는 등 제동이 걸린 상태다.



추석 이후 흰우유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 1일 오전 서울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aT센터 낙농수급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낙농제도 개편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지난 2일 간담회에 참석한 생산자 단체가 정부 제도 개편 방향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낙농진흥회 개최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분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그간 제도 개선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낙농가가 찬성으로 돌아서면 낙농진흥회 이사회의 개편은 물론 개편안 통과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간담회에서는 우선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대해 조합장과

생산자단체, 유가공협회 등 간담회 참가 인사 모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도입 초기에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195만톤은 음용유 가격을, 추가 생산되는 10만톤은 가공유가격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전체 원유 중 5% 이내 가공유에 차등 가격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생산비에만 연

동해 가격을 결정하는 현행 생산비 연동제는 생산비 외에 수급 상황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가격결정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도 합리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관을 개선해 다양한 낙농 관련 안건이 이사회에서 폭넓게 논의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생산자 측은 낙농산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라는 대응적 차원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는 방향에 동의하나 사료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가 급격히 상승해 경영상태가 악화된 농가가 크게 증가해 원유가격 인상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원유가격 협상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유업체 측에 강하게 요청했다. 실제로 젖소용 배합사료 가격은 지난해 kg 당 447원에서 올해 8월 kg 당 621원으로 38.9% 급등했다.

유업체들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동의하나, 음용유 195만톤은 실제 수요보다 높은 수준으로 원유 구매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생산자와 유업체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추가 검토하겠다”며 “낙농진흥회 이사회 의결 후 낙농진흥회 내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원유가격 협상도 소위원회 등을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의 미래를 위해 제도가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각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배달앱 부당 계약해지 등 ‘갑질 약관’ 손질

공정위, 불공정 약관조항 발견·시정 최고절차없는 일방적 제재 고치기로

앞으로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3개 배달앱 사업자는 배달앱 서비스 중단 등으로 입점한 음식점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중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또 고객 평가가 낮거나 민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음식점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인 음식점주와 체결하는 음식점주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발견해 시정하도록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 단체 신고가 있어 이를 심사했고, 신고와 관련된 일부 조항은 직권으로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부당한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조항이 사라진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그간 계약이행과 관련없는 입점업체 재산의 가압류·가처분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판매자의 귀책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민원이 빈발한다는

등의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최고절차도 없이 계약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제한 등 제재를 해왔다.

앞으로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주요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에 한해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했고, 계약해지 등 사유에 재주문을 포함하고, 고객의 평가가 일관되게 객관적으로 현저히 낮은 경우로 구체화하는 한편 제재조치 시 이의신청 또는 시정기회를 부여하도록 해 회사의 일방적 제재 가능성이 없었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는 그간 정보통신설비의 수리나 교체 등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 회원에게 손해 발생 시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회사는 계약상 이행해야 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며 “회사의 책임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한정해 경과실에 따른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배달앱 사업자의 회원(음식업주)

게시물에 대한 부당한 이용조항을 고쳐, 계약해지 시 음식점주가 게시물 삭제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음식점주와 별도 협의한 후 게시물을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배달앱 사업자가 통지하는 내용의 중요도를 따지지 않고 웹사이트 게시 방식을 허용해왔으나, 앞으로는 입점업체에게 불이익이 있는 내용이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공정위는 “약관 시정으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음식점주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사업자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배달앱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편 자율규제 전담 지원조직 운영과 자율규제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통한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지난달 11일 2년 만에 수문을 열고 방류 중인 소양강댐. /뉴시스

## 폭우 몰고 오는 ‘힌남노’... 주요 댐 방류

환경부, 6개 댐 사전 방류 확대 방류 하루 전 사전예고·경보방송

강풍과 많은 비를 동반한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로 북상하면서 정부가 소양강댐, 영주댐 등 6개 댐의 사전 방류를 늘리는 등 대비에 나섰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7개 유역 환경청과 홍수통제소, 기상청 등 관계기관은 현재 댐의 홍수조절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방류를 확대했다.

태풍 힌남노는 오는 6일 제주를 거쳐 경남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국에 폭우 등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 행정안전부는 태풍·호우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올렸다. 재난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까지 4단계다.

환경부는 댐의 홍수조절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대비에 나섰다.

소양강댐은 초당 200t의 최대 발전방류를 시행 중인데 다음 주 초 수문 방류도 검토 중이다. 영주댐은 17t을 방류 중인데 이날 오후부터 초당 50t으로 방

류량을 늘릴 계획이다.

횡성댐은 지난달 30일 낮 12시부터 초당 30t의 수문을 방류 중인데 3일 오후부터 초당 100t으로 방류량을 늘렸다.

남강댐과 광동댐은 지난 2일 오후부터 각각 초당 400t과 20t, 대청댐과 보령댐, 충주댐은 3일 오후부터 각각 초당 300t, 50t, 1000t 가량 수문을 열어 방류 중이다.

환경부는 향후 기상, 수문상황에 따라 댐별 방류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20개 다목적댐은 약 58억t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수계별로 약 270~600mm의 비가 내려도 댐 방류 없이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댐 방류시 하류 지역 주민들이 미리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방류 하루 전에 실시하는 사전예고제와 함께 방류에 따른 경보방송, 순찰 및 계도 등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 명태·오징어 등 비축 수산물 1000t 쏟아

해수부, 시장 등서 최대 30% 할인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비축했던 수산물 명태와 오징어, 고등어 등 1000t을 시장에 쏟아. 전국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5일부터 일주일간 정부 비축 수산물을 최대 1000t 방출한다고 4일 밝혔다.

방출되는 수산물은 명태 332t, 오징어 202t, 고등어 107t, 갈치 165t 등 1000t에 달하는 물량이다. 전국 대형마

트는 5일, 전통시장은 6일부터 시중 가격보다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구도형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태풍 등 수급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연휴 동안 수산물 구매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까운 전통시장이나 마트에서 우리 수산물을 많이 구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